

전남도, 중기·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경제·포스트 코로나 대응 스마트 공장 195개 지원 확대 비대면 스마트 상가 도입 본격화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영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전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제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

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지방비 30%를 추가 보조하고 있다. 2019년 129개 기업에 이어 지난해 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으며, 올해 195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신규 또는 고도화로 구분했던 지원체계를 각 공장의 구축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도입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시까지 일대일 밀착 지원하는 스마트 코디네이터와 도입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 TF팀 등 운영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대면 기반 스마트 상가 도입도 본격화한다. 스마트 상가는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인회, 번영회 등 조직화된 상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러와 스마트 메뉴보드,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술은 물론 비대면 기반 모바일 예약·주문·결제시스템인 스마트오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지역 3개 상가 내 18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며, 내년 6개 상가 3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5개소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마트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대면 판매방식이 주를 이루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슈퍼에 대해서는 스마트 출입구, 무인자판기 등을 지원해 낮시간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50개소씩 전환해 오는 2025년까지 250개의 스마트슈퍼를 도입, 소상공인 노동시간 단축과 24시간 영업을 통한 추가 매출 창출을 유도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비대면 온라인 영역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이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훼 농가 도움시다” 광주시, 꽃소비 촉진 캠페인

광주시는 “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가게를 돕기 위해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상생활에서 꽃을 주고받는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8일 시청 시민홀에서 명절에 꽃을 선물하는 “꽃피는 명절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날 캠페인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만나기 어려운 친인척, 친구 등에게 동네 화원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꽃을 선물하자는 메시지도 전파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꽃이 있는 날’로 지정한다. 꽃 무인 판매, 1인 1화분 키우기 운동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 꾸러미 선물 세트’ 판매도 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꽃을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식을 확산해 화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설 성수 식품 ‘안전’ 203건 중 99% 적합 판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검사한 결과 99.5%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명절에 수요가 많은 농산물 100건, 유통 식품 81건, 수산물 22건 등 총 203건을 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식중독, 기름 부패도, 방사능, 중금속 등이다. 방사능, 중금속 등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잔류농약 성분인 디니코나졸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참추(1건)는 즉시 압류·폐기했다. 조배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외관 상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충분히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난개발 방지 건의문 전달 이윤성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책협의회 허민 위원장으로부터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 받고 있다.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군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장 한국적이고 안전한 음식, 해양, 문화, 생태 자원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여행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도·시군 관광실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기간 연장, 도가 운영 중인 관광진흥기금의 용자 대상 확대, 시군 행사·축제 개최 시기 등의 상호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전남관광플랫폼(J-TaaS) 구축, 전라남도 방문의 해 추진, 관광신산업 창업지원, DMO 육성지원, 관광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등 을 한해 추진할 주요 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또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획공명형 지역관광 개발, 명품 해양관광단지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남관광플랫폼은 손바닥 안에서 지역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교통, 숙박, 식당 등을 실시간으로 예약·결제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코로나 이후 전남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안전하고 품격 높은 관광시스템을 촘촘히 준비해 전남이 대한민국 체류형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관광업계 등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상복합아파트 높이 규제 ‘1개월 유예’ 반대 목소리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상정 건설업계 반발에 조례안 유예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을 1개월 유예하는 것과 관련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유예기간에 대해 허가 신청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현 도시계획조례의 상업지구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주거지역보다 높은 고층 아파트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광주시의회가 ‘1개월 유예’를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이 유예기간 중 상업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인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조례 개정안이 외부에 알려지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이 서둘러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조례 개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번 조례를 통해 우후죽순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그 시행이 1개월 유예될 경우 과거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규제와 같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월 최대 250만원 지급 6월말까지 대상자 모집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남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로,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벼·사과·마늘 등 일정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

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 후 지난해까지 도내 총 7334개 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약 15억원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러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 기준면적을 벼 4100㎡에서 3500㎡로 낮췄고,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했다.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